**240228 수**

**\*이슈 1 – 전세사기 특별법**

[**[경향1면]쫓겨날까 하루하루 불안···특별법에도 변한 게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 첫 사망 1주기]**](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32/0003281362?date=20240228)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들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을까.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특별하게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특별법에 품었던 기대는 은행에서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법에 담긴 대환대출, 저리대출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가로막혔다. 성씨는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한 차례 거절당한 뒤 끈질기게 다시 신청해야 했다. 김씨는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며 대환대출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들이 지난 1년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를 정부와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사이 사기꾼 남모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전세사기는 사인 간 거래’라고 말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선언했다. 김씨는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된 고인이 이 상황을 보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회가 논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보이지 않았다. 이씨는 “그냥 예정된 회의니까 여는 것이지, 개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나서서 무얼 했는지 모르겠고 큰 기대는 없다”라고 했다.

**[[경향6면]“사회초년생 터전 할퀸 전세사기”···대전 2030 피해자들이 뭉친 이유[전세사기 피해자 첫 사망 1주기]](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32/0003281361?date=20240228)**

인천과 대전 사이엔 시차가 존재한다. 1년 전 인천 미추홀구에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며 뒤늦은 ‘외양간 고치기’ 시도가 있었다.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은 대전 피해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대전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의 75.1%(1459건)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데, 이들은 특별법 사각지대에 속했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를 사고팔 수 있는데, 이와 달리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오직 한 명이다. 건물 내 개별 등기가 불가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은 우선매수권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다가구주택 대다수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쪼개기·증축으로 방을 나눠 놓았다는 점도 피해 복구가 어려운 이유다.

[**[동아10면]전세사기 특별법 9개월, 피해 1만3000명 중 199명만 구제 마쳐**](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0/0003550369?date=20240228)

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한 지 9개월이 지났다. 765명이었던 전세사기 피해자는 올해 1월 말 기준 1만3000명으로 17배로 불어났다. 그중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등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거나 종결을 앞둔 피해자는 199명(1.5%)뿐이다.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가 많아 특별법 수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구제가 마무리된 사례가 아직 200건이 채 되지 않는 것은 경·공매 자체가 최소 2, 3년이 걸리는 긴 절차이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책도 경·공매 기간에 세입자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해 주거나 미상환 전세대출을 최장 20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피해 주택을 낙찰받았다고 해도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 A 씨는 2022년 4월 사기 피해를 당했던 전셋집을 1억4200여만 원에 낙찰받은 후 가격을 1000만 원 낮춰 매물로 내놨다. 보증금 1억9800만 원 중 일부라도 건지고 싶었지만 2년 3개월이 지난 현재 집을 보러 온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

피해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근생빌라나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경우 현재 특별법으로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세대주택처럼 호수별로 소유가 나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주택을 통째로 낙찰받아야 해 그만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다. 세입자 간 협의 과정도 복잡하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를 당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입자가 계약 전 사기를 당하지 않게 꼼꼼하게 살펴야 하고, 이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현재 피해를 당한 분들 중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원책도 일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굳이 전문가의 말을 빌어 하나마나 한 소리를 하는 이유는?

[**[조선6면]전세사기 先구제법, 野 단독으로 본회의 올려**](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819164?date=20240228)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7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선(先)구제’하는 내용의 법안.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문제를 들어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여해 모두 찬성했다.

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런 제도들이 선거에 앞서서 나오니 졸속일 수밖에

야당, 질문하거나 ‘의회 다수를 확보하면 가능하다’라고 빠져나감

= 실현가능성 크지 않은 것을 일단 던지는 것

= 진짜 포퓰리즘

여야, 이런 식으로 선거 치르면서 마구 던지냐

대환대출

= 빚을 돌려 막는 것

= 리볼빙revolving

= 빚을 빚으로 막는 것

= 대출 연장

(한자로 써서 어려움)

한겨레 리빙 출간 시, 60억 삼성생명에서 대출

삼성에서 한겨레에 빌려준 이유?

삼성에서는 때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한겨레 멱살 잡기 위함

돈 갚으라는 아무 연락도 없음

가장 답답한 것, 기간이 되도록 리볼빙 안 되면 못 갚는 상환

은행 지점장은 갚으라고, 삼성 측에서 풀어주고 -> 반복

사외이사 = independent director

‘독립이사’라는 표현인데 번역, 말이 애매

오너가 임명한 이사라는 점에서 이미 본질 흐려짐, 그런 맥락이 묻어남

독립된 지위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오너가 임명하면서 들러리로 전락

사외이사가 반대하는 경우 거의 없어

사전, 어원 찾아보고 글 쓰는게 유리

**\*이슈 2 – 스웨덴 나토 가입**

**[경향1면] ‘중립’ 스웨덴까지 품은 나토, 발트해서 러시아 포위**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 확장’이라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다. 스웨덴이 200년 중립국 노선을 버리고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하면서 러시아는 전쟁의 목표와는 정반대로 나토를 발트해 앞마당으로 불러오는 자충수를 두게 됐다.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까지 나토에 합류하면서 러시아는 발트해에서 나토 동맹국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는 형세가 됐다. 발트해 연안에는 러시아의 역외 영토이자 발트함대 본거지인 칼리닌그라드와 러시아의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접해 있다. 특히 스웨덴의 합류로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과 폴란드의 가장 큰 안보 불안 요소였던 칼리닌그라드가 고립돼 러시아 해군의 진출을 봉쇄할 수 있게 됐다. 나토는 향후 스웨덴 동남부에 있는 고틀란드섬을 중심으로 대러 방어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합류로 발트 3국과 나머지 나토 회원국을 잇는 유일한 육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접경의 ‘수바우키 회랑’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경우 나토가 지원군을 보내기도 쉬워졌다. 러시아가 이 지역을 장악하면 발트 3국과 나머지 회원국을 분리하는 동시에 고립된 칼리닌그라드와 우방 벨라루스를 육로로 연결할 수 있어 수바우키 회랑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확전의 화약고’로 꼽혀 왔다.

지정학적 강점 외에도 해군력이 강한 스웨덴의 합류는 나토의 북유럽 전략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북극해 전략을 통제하는 데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이 역할을 할 것으로 나토는 기대하고 있다.

**[한겨레1면] ‘200년 중립’ 스웨덴, 나토 32번째 동맹국 된다**

헝가리 의회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관한 의정서 비준 동의안을 찬성 188표, 반대 6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2022년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면침공 뒤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느낀 스웨덴이 석 달 뒤인 5월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서를 낸 지 21개월 만이다. 기존 나토 회원국 중 유일하게 가입 동의를 하지 않고 있던 헝가리도 찬성해, 스웨덴은 나토 가입 마지막 허들을 넘었다. 나토는 스웨덴을 동맹으로 품으면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발트해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포위하는 형세를 갖추게 됐으며, 유럽 안보 지형은 큰 변화를 맞게됐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지난해 4월 먼저 동맹에 합류한 핀란드보다는 열 달 가량 지체됐다. 나토 가입을 위해서는 동맹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데, 그동안 나토 동맹국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던 튀르키예, 헝가리 두 나라가 정치적 이유로 의회 비준을 미뤘기 때문이다.

**[한국13면] 스웨덴 합류한 나토, ‘발트해 포위’ 완성… 러는 ‘군관구 부활’로 맞대응**

3년째로 접어든 전쟁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자는 국제사회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특히 **나토와 유럽연합(EU)의 일부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동아1면] 나토 연합훈련… 중립국 스웨덴도 회원국 합류**

**[조선16면] 스웨덴, 32번째 나토 가입… 북극해~지중해 ‘러 포위망’ 완성**

스웨덴은 나폴레옹 전쟁 기간인 1814년 이후에는 어느 국가와도 군사 동맹을 맺지 않는 중립 노선을 지켜왔다. 대신 자체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북유럽 최대 규모의 육·해·공군을 유지해 왔다. 스웨덴의 재래식 군사력 순위는 세계 20위권으로 평가된다. 북유럽에서 유일하게 자체 전투기 개발과 생산 능력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재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년 만의 전면전이 유럽에 발발하자 서둘러 나토 가입에 나섰다.

유럽 국가들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유럽산이 아닌 한국 등 제3국에서 생산한 탄약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프랑스 등이 비유럽 국가에서 만든 탄약과 무기를 EU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극심한 포탄 부족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최근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유리 김 미국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한미연구소(ICAS) 주최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정치적 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 지원을 제공했으며, 우리는 그런 물자가 우크라이나로 더 가는 것을 보고 싶다”고도 했다.

**[중앙14면] 나토, 스웨덴 껴안고 ‘발트해 포위’ 완성…러는 군 개편 맞불**

한국인 핏줄이면서 미국에 빌붙어 사는 인물들(빅터 차, 정 박, 유리 김 같은)

평생 콤플렉스 때문에 더 강력하게 발언하고 과한 언사를 하는 경향.

스웨덴, 잘못 위치를 잡았다고 생각

중립, 비동맹 외교로 입지를 굳히고 있었다, 균형 추 역할

아시아, 아프리카에도 비동맹 국가가 많아(인도네시아 등)

스웨덴, 굉장한 군사 강국

대표 회사, 볼보

볼보 = 튼튼하다**(Volvo effect -> 정확한 표현 찾기; 지나치게 안전에 투자하는 현상)**

트럭이 튼튼한 이유, 원래 군수업체였기 때문(기술이 내려와서)

**\*추가**

[**[한국]교통비 할인 정책, 진짜 '기후동행' 효과 있으려면**](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469/0000787740?date=20240228)

*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세워만 둬도 유지비가 든다. 차를 안 타면 손해라는 말이다. 여기에 6만 원이 넘는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하면 이중 지출이 된다.
* 실제로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각각 27%와 29%로 절반이 넘는다. 20~30세대의 승용차 소유는 16%밖에 안 된다.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들에게 유인이 없다는 이야기.
* 한국일보는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수도권 자동차 운행이 줄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K패스가 도입되면 지역 연계 문제는 해소되겠지만 역시 자가용 운전자를 대중교통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는 분명하지 않다.
* 몇 가지 대안이 있다. 김광일(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주행거리 감소 실적과 대중교통 할인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예 100회 무료 탑승 마일리지를 선지급하자는 제안도 있다.
*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선불 카드다. 6만5000원이면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월27일 출시 이후 2월25일까지 46만6000장이 팔렸다.

지수)

‘전세사기특별법’, ‘기후위기’

-> 총선 전에 이런 것도 봐야한다, 하고 아젠다를 제시하지만 다뤄지지는 않는 것 같아

봉샘)

‘신행정수도‘ 총선 전 발표, ‘선거이슈’로 등장해 대단한 이슈선점효과 -> 거센 반대이론

박정희도 신행정수도를 고려했지만 실패, 민주당만의 생각은 아니었음

노태우, KTX 던졌을 때도 격렬한 반대. 선거를 좌우.

KTX 반대했다. 고속철도를 많이 놓기 위해, 수익을 내기 위해

Door to door도 안 되고, 역도 얼마 없고, 시간 많고 돈 절약할 수 있는 완행열차 사라짐

탄소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도움 안 되는 실정

선거이슈로 등장하지 않으면 차분히 진행할 수 있을텐데

그렇게 던져야 할 이슈는 개발공약이 아니라 청년실업, 양극화 같은 우리 사회의 진짜 고질병

유럽은 선거 이슈로 세금 증감 여부, 학교 교육 개혁, 복지 등.

개발공약은 타당하지도, 정의롭지도, 민주적이지도 않는다.

그냥 덜컥 던지는 경우가 허다.

비판하면서도 이슈선점 효과를 위해 기사화하기도.

선거판에서 이런 이슈를 민감.

던져진 의제가 어떤 내용이느냐에 따라

R&D 예산 깎아서 역공이 들어오니까 ‘이공계 지원금 000주겠다’, 카이스트 가서 발언

정부예산이 걸려서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데, 예산도 깎아놓고.

공약 던지고 책임 못질 발언, 말과 행동이 다르다.

공약

한국사회에서 이슈화되어야 하는 의제가 뜨는 것은 좋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개발공약 같은 것은 백해무익, 오히려 그 정신 해쳐

[**[동아]“홍채 등록땐 공짜 지급” 월드코인 과열조짐**](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0/0003550390?date=20240228)

곧 사람이 어디에 가서 뭘 하고, 누굴 만나는지 등 모든 생각과 정보가 읽혀서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농후

[**[미디어스] KBS 기자는 '왜' 자사 상대로 정정보도 신청했나**](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53)

🡪 내곡동보도, ‘생태탕’ 프레임, 오보로 몰아감

거기 가보면 모든 증거가 있어

보도는 옳았다

항상 프레임 전환,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땅 – 개발

행정지역 – 토우들과 유착

크게 보면 대장동과 유사

보도하려는 사람들을 차단하려는

삼성 X파일, 노회찬은 죽고 이 기자는 공황장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피해 보는.

KBS 기자도 억울한 상황. 박민 등의 인사들이 검언유착 심해.

‘법조언론클럽’ 민주주의의 역적들